

■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전망과 반응

“거품 제거, 시장 안정” vs “반시장적 발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따라 향후 분양가 인하효과 및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업계의 건촉비 ‘거품’을 자연스럽게 제거함으로써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전으로 ‘정책의 시계’를 되돌린다는 의미여서 민간주택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향후 ‘공급 위축’으로 인해 집값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8년만에 ‘부활’=민간 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1999년 1월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8년만에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가격 규제가 부활하게 된다.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도

1999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투입비용에 적정이익을 보태 결정했다. 공공택지의 경우만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항목의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도 결정됐다. 마

너스 옵션제는 골조만 시공하고 내부 마감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감제 선택은 입주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전문가·건설업계 반응 엇갈려=당·정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지만 향후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데다 전문가들과 건설업체 등과의 견해 차도 크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박헌주 원장은 “시장경제 논리는 벗어나지만 건축비가 인하되면 분양가를 낮춰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시장분위기에 편승해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이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회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도 아닌데 민간택지에까지 건촉비를 제한하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웬만한 대형 건설사는 공사비를 맞추지 못해 앞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위축·품질저하 우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11·15 공급확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민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당장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공급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급 보좌관제 ‘꼼수’ 통과

시의회, 시장 반대 불구 원안 가결

반대 의원에 주목될 추태도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시장의 반대로 도입 무산된 유급인턴보좌관제를 다시 번적으로 상정, 의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번칙처리를 반대하는 의원과 밀어붙이자는 의원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일어났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유급인턴보좌관제 예산 1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증액부분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이 ‘부동의(不同意)’ 입장을 밝혀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예산안을 수정(유급보좌관 예산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의회 회기가 며칠 남지않았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요구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수정 재의결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때 수정해도 된다’는 공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의 계산대로 광주시가 예산안 수정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인턴보좌관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한편 시의원들이 예산안을 원안통과시키려 하자 이상동 의원은 ‘편법 처리’라며 강력 항의했으며 서도 의원은 “인기 발언을 하지 말라”며 시비가 붙어 두 의원들이 주먹질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시의회는 이 의원이 퇴장한 후 예산안을 번칙 상정, 통과시켰다.

집행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내낸 광주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효력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시의회 정거회 폐회일인 19일 이전까지 예산수정요구를 해야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됐다.

또 회기가 부족할 경우 지방의회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미니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일도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박 시장은 본회의에 출석해 “의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으로서 유급 인턴보좌관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차시장은 거부했지만... 박광태 광주시장이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참석, 의원 유급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직경기자 jrwi@

광주시내버스 노선개편 혼선 최소화해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노선 개편(21)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은 현행 77개 노선에서 86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시내 주요 지점 5개 노선을 비롯한 간선버스 19개, 지선 버스 62개로 개편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편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마을버스 13개 노선과 지하철 1개 노선까지 고려하면 모두 100개 대중교통 노선이 통합운영돼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 확대개편과 대중교통망 통합운영은 미래 도시교통 체계정비를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긍이 된다. 문제는 대대적인 노선개편으로 인해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혼란의 정도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신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승강장 등에 ‘버스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망 안내 체계를 보다 선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개편노선을 모르고 있거나 개편 당위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칫 시행 초기부터 극심한 혼란과 이에 따른 대형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신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승강장 등에 ‘버스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망 안내 체계를 보다 선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광주 해방구’ 발언 징계가 고작 ‘경고’인가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15일 ‘광주 해방구’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강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회봉사’보다 못한 형식적인 ‘경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 의원이 감재섭 대표 등과 더불어 사회봉사를 한 마당에 뒤늦게 가장 낮은 징계를 내린 것은 미분책임 뿐이다.

윤리위원회 인명진 위원장은 “본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한다면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보이겠다고 해서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발언에 대한 문책이 될 수 없다. 경남 창원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한 김 의원은 해피한 논리로 광주와 전남·북을 기피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한 거들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호남 꺼안기’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광주시와 전남 및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따따로 당론 따로’인 현실에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군부 정권의 실세였던 김 의원이 끊임 없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편견과 왜곡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념일 수 있다.

색깔론이나 흑색선전 등은 대표적인 구시대적 행태다. 한나라당도 소속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대한 ‘짜내내기’나 ‘음해성 폭로’를 경계하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은 민정당과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굴레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이 색깔론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보수팔통당’의 이미지가 ‘부메랑’이 될 수 있고 ‘호남 꺼안기’는 허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선 광주 동구 공천은 박주선”

민주 한화갑 대표 토론회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5일 “최근 임명된 지역운영위원장은 관리형이지 그것이 국회의원 공천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동구의 경우 김중배 위원장이 서운해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공천할 때 박주선(전 의원)이 1순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역운영위원장이 차기 총선 공천 유력자로 예상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날 한 대표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계개편 토론회 도중 몇몇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천은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자신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정치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을 이어 받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림부 “익산 AI 인체감염 우려 없다”

동남아 바이러스와 달라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H5N1형 2건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전자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익산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

는 지난해 5월 중국 칭하이 호수의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1형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자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는 다른 그룹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번에 발생한 AI 바이러스의 유전자 그룹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와도 같은 그룹”이라며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정동채·조성래 의원 계좌추적”

검찰, 게임비리 수사 본격화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과 같은 당 조성래 의원의 본인 또는 주변 인물 등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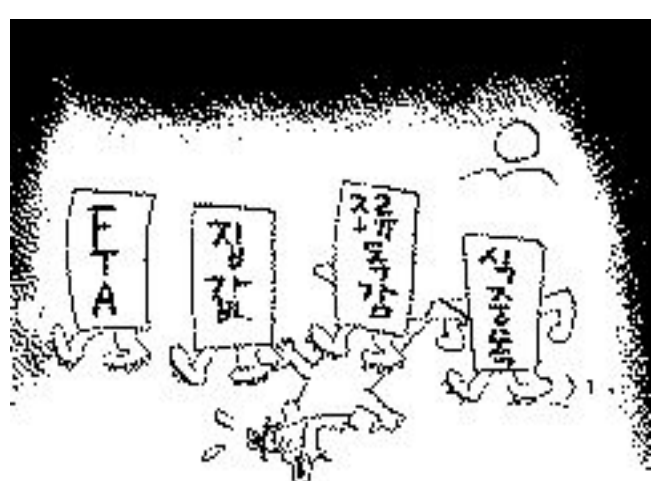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상품권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 보좌관과 관련된 계좌 등을 보고 있고 지금도 추적 중이다. 막바지 단계인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고, 장관 재직 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산업이 성행하고 ‘도박용 칩’으로 사용됐던 경품용 상품권 정책이 도입돼 인증·지정제 등으로 바뀌었다. /연철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무던히도 밟고 지나간다

“이회창은 이순신 아니라 원균”

한나라 최구식 의원 공개 비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15일 의원총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를 공개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재가 최근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라는 표현을 통해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꼬집은 것. 최 의원 발언 요지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었음에도 이 전 총재의 ‘착각과 오관’ 때문에 패한 만큼 정계 복귀는 절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지만, 원내 지도부가 그를 도중에 연단에서 끌어내리는 바람에 발언을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회창씨는 두 차례 대선에

서 패했다.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불패의 군대(당)를 이끌고 그랬다”면서 “이회창씨는 총무공이 아니라 원균에 가깝다. 역사를 보면 원균은 그나마 (이 전 총재보다) 나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이회창씨는 1차 때는 아들 병역, 2차 때는 아들·딸 빌라문제 등 본인 과오로 패배를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력이 강해 이길 수 있었으나 이회창씨의 착각과 오관이 (패배하는데) 결정타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 부대표들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자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이렇게 황당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공개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모독 시의원 사퇴하라”

광주시 공무원노조 성명

광주시의원의 공무원 모독성 발언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조총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모 의원의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시공직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했다”며 “공개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 의원은 시 간부 등 공직자를 싸잡아 카멜레온이니, 야누스 얼굴을 하고 있다는 등 인격 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佛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박준영 전남지사 17일 출국

박준영 전남지사는 1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박 지사는 19일 BIE 총회장에서 지지연설을 통해 박람회 유치에 대한 도의 SOC확충 노력과 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을 벌인 후 오는 21일 귀국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로코, 폴란드 등이자국의 박람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개최후보지를 소개한다. /박지경기자 unipark@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website information.